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92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17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박준태 · 주호영
김선교 · 박덕흠 · 김형동
김성원 · 고동진 · 김태호
서천호 · 임이자 · 윤재옥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,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.

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나, 기존 법령상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,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.

이에 따라,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2조).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단서 중 “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”를 “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산림소유자의 주소지로 산림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
2. 제1호에 따른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30일 이상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산림사업의 시행) ① 산림 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,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<u>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</u>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.	제22조(산림사업의 시행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</u> ---- ----- --.

<u><신 설></u>	<u>1. 산림소유자의 주소지로 산림</u>
<u><신 설></u>	<u>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</u>
	<u>2. 제1호에 따른 통지가 불가능</u>
	<u>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</u>
	<u>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자치</u>
	<u>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
	<u>방법에 따라 30일 이상 산림</u>
	<u>사업 내용을 공고</u>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